

진보정당 광주·전남 지방선거 성적표는?

<통진당·정의당>

광역의원, 신당 '꼴리잇'에 맞선 '다윗' 싸움될 듯

기초의원, 무공천에 후보 난립...당선자 수 주목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의 6·4 광주·전남 지방의원 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주목된다.

양당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통합 추진과 현직 프리미엄 등으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 통합신당 시너지'에 소수야당 선거 영향은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통합 추진이 광역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측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합신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와 달리 광역의원 후보는 공천하기로 한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꼴리잇(통합신당)과 다윗(소수야당)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신당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부동표까지 흡수할 수 있어 소수야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12일 "중간

지대에 있던 유권자들이 통합신당으로 쓸릴 수 있다"며 "광역의원 선거에서 소수야당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통합신당과 1대1 구

내놓고 있다.

통합진보당 전주연 광주시의원은 "통합신당이 창당되면 통합진보당과 1대1 구도가 형성될 바탕 지층이 확고한 통합진보당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통합신당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 의회의 견제기능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시의원은 1명, 전남도의원은 3명이다. 정의당 소속 광주시의원은 1명이고, 전남도의원은 없다.

◇ 통합신당 무공천'이 소수 야당엔 '유리' =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통합신당의 기초의원 무공천이 자당 후보들에게 일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은미, 전주연 의원은 "통합신당 상향의 기초의원 후보가 낙선했을 것"이라며 통합진

보당과 정의당 소속 후보들이 부각할 기회가 커졌다"고 낙관했다.

특히 정의당보다 '인적자원'이 풍부한 통합진보당은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주연 의원은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기 때문에 밀바다 지지층이 겹친다면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투표율에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당명이 명기되지만, 통합신당 성향 후보들은 '무소속'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초의원 선거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현장에서 투표율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 기초의원은 14명, 전남 기초의원은 10여명이다. 정의당 소속 광주 기초의원은 4명, 전남 기초의원은 6명이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선거펀드 조성 봄 이용섭 등 3명 개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과 예비후보들이 투명한 선거자금 확보를 위해 잇따라 펀드를 개설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현재까지 선거 관련 펀드를 출시한 출마예정자나 예비후보는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윤봉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 등 3명이다.

이용섭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깨끗한 광주, 이용섭 혁신 펀드'를 출시한다.

이 의원은 광주시장 선거비용 한도액인 6억9300만원의 72% 수준인 5억원을 시민펀드로 조성하고 선거 이후 이를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봉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도 지난달 25일 '윤봉근 시민교육감 펀드' 모집을 시작했고,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도 지난달 27일 '임우진의 희망 새자치 펀드'를 출시했다. 펀드 이자는 CD(양도성예금) 금리(2.65%) 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 금리(2.75%) 수준이다. 다만, 이 의원은 이보다 다소 높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금과 이자는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8월 3일 이후 펀드 참여자에게 지급된다.

이 같은 독특한 모금 방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돈 선거의 관행을 깨고, 펀드에 가입한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자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총리가 나서야"

민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정총리 "충분히 고려해 조치"

강기정·이용섭·임애현 의원 등 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해 결의안을 통과 시킨 상황에서 보훈처가 국론분열 등을 이유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총리가 주관해 기념곡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오늘 면담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조치하도록 시지하겠다"고 답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이에 강 의원 등은 "보훈처가 부정적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다시 보훈처에 시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보

훈처는 총리실 소속의 기관이니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면담 후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의 결의에 따라 총리가 결심하면 간단하게 끝날 사안인데도 역사와 국회를

무시하는 보훈처의 처사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총리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면담 후 별도로 정총리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오늘 자리는 정부가 광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빚어았아갔던 '임

을 위한 행진곡'을 어떻게 언제 되돌려 줄 것인지를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마치 총리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만나주고 대화에 응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듯한 모습에서 참으로 유감이었다"고 지적한 뒤 성의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기쉬운 선거법 (2)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선거사무소, 해당 선거구 내에 1곳만 가능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예비후보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의 종합기구이다.

◇ 1개의 선거사무소 설치 가능=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사무소를 고정된 장소·시설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식품점·약업점·단기주점 등·공중위생영업소(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등)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구 내에 설치할 수 있고, 정당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보기 때문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하기 위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다.

◇ 간판·현판·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현판·현수막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등의 수량·규격 제한은 없지만,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제거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담장에는 간판등 외에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소 내부에 선거 구호·사진·포스터 등 인쇄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에 '후보자'라고 표시할 수는 없으나, 당해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표시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서 다른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제한·금지하는 다른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 선거사무소 이외 다른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 유사기관 해당=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에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유사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사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왜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존속시켰나" 박주선

"초과이익 공유제 등 지원대책 내놔야" 김승남

'한·캐나다 FTA' 비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9년여의 협상 끝에 타결된 가운데 12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협상 내용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다.

◇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존속=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캐나다 FTA에서 국민안전과 우리 기업의 이 중부담 등을 이유로 애초 폐지기로했던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를 존속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캐나다 FTA에서 농업분야의 가장 큰 관심대상인 쇠고기의 경우, 현행 관세 40%에서 향후 1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정한다'는 자동차안전기준화세칙 제4조 규정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8월 이를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캐나다 FTA 협정(TPP) 참가를 위해 캐나다와의 FTA 협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회망공인증개사

고객님의 성공을 회망합니다

상가/건물

- ▶ 상무지구 신축건물 매 72억
- ▶ 쌍촌동 광승간 대로변 3층건물 매매 12억
- ▶ 쌍촌동 5층건물 매 15억(보 1억7천 월656만원 포함)
-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구분점과 225m² 매 12억(보 1억3천 월600만원 유령프랜차이즈 입점)
- ▶ 전남대 정문 신축 4층원룸건물 480m² 매 12억(보 1억3천 월477만원)

대지/전답

- ▶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m² 매매 26억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661m² 매매 14억
- ▶ 서구 쌍촌동 대지 5,000m² 32억(원룸단지적합)
- ▶ 남구 주월동 병원지역 대지 2,290m² 매매 54억
- ▶ 북구 신안동 대지 3,100m² 매매 36억
- ▶ 북구 문흥동 교도소부근 접지 6,300m² 매매 50억
- ▶ 광산구 대신동 계획구역지역 29,800m² 39억
- ▶ 세하동 창고 1,590m²(건234m²) 매매 7.2억
-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용 5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서구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010-5536-0382 062) 373-3032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공장 급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m² 건물 1,300m²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m²) 일반 공업지역(2,400m²) 허가필. 매매가격 18억원

신진공인증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

신축원룸 매매전문(전대1분)

수익성상가 매매전문

금당공인증개사

★전대상대1분(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룸21개 (상가 2칸, 4층주택)
엘리베이터 시공, 대리석, 벽돌시공
월수익 850만(연 1억)
매가 12억(보1억 월3억) 수익률 13%

★전대정문,후문1분(신축4층룸12개)★

1층 상가: 4층주택, 월수익 400만 매가 6억 7천

★서구화정동신동아APT★

(신축5층 룸 27개 상가 85평)
월수익 1400만 (보3억 웅5억) 매가 21억

★북구용봉동신축4층룸14개★

(안집1개) 보2600 월470 월2억 매가 7억 5천

★신안동신축원룸(정문1분)★

월수익 14 안집(30평대)
보2800 월450만 매가 8억 7천

★용봉동원룸,원투룸18★

안집(50평대) 월수익 610만 매가 10억 5천

★나주이창동KTX역5분거리★

월수익 18개 보 800만 월 540만 매가 5억

010-6670-9800
062)952-5984